

# 광주시, 복합쇼핑몰-골목상권 상생 해법 모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함께 23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영향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복합쇼핑몰 대시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복합쇼핑몰이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소상공인·소비자·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상생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개 논의의 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토론회는 김은희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대규모 점포 출점이 지역상권 및 골목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상생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민경본 광주상인연합회장 ▲손희정 광주소비자단체협의회장 ▲이성호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김명진 전북과학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지역 상권의 경쟁력 확보 방안,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긍정 효과 지속 방안, 복합쇼핑몰과 지역상권의 구체적 상생 방안, 용역보고서의 신뢰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복합쇼핑몰과 지역상권 간 상생방안



## 시-민주당 광주시당, 복합쇼핑몰 대시민 공개토론회 지역경제 영향 진단·정책적 대안·상생 모델 등 논의

으로 복합쇼핑몰 로컬 매장 마련, 지속가능한 상생발전기금 조성, 상생홍보관 등 지역상권 마케팅 방안 마련, 지속적인 상권영향평가 실시 등이 제안됐다.

지정토론 이후 현장에 참석한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질의·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생활권 변화, 골목상권 보호의 필요성, 소비자 선택권 확대, 지역경제 기여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실효성 있는 상생 제도 마련과 상권 영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소비구매력

을 높이는 핵심으로 복합쇼핑몰을 추진했고, 여러 곳의 입점 사례와 용역 결과를 통해 소비구매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상권 영향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긍정 효과는 어떻게 극대화할지 등을 논의해 보자"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규모 점포 출점 관련 정책 방향과 상생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신영길 기자



## 광주시, 올해 39억 투입 수소차 106대에 보조금 수소승용차 1대당 3100만원·수소버스 3억5000만원 보조금 26일부터 예산소진때까지... 2014년부터 수소차 1529대 보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사업비 45억 2100만원을 투입, 오는 26일부터 친환경 수소차 106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은 수소승용차 104대와 수소버스 2대로, 광주시는 수소승용차 1대당 3100만원을, 수소버스 1대당 3억50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중 수소승용차 11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보급한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17.4t, 온실가스(CO<sub>2</sub>) 2968t을 줄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34만 50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이다.

현재 광주에는 진곡·동곡·임암·벽진·월출·장등·신촌·매월 등 8곳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나병훈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지난해 수소차 신청 모델이 출시되면서 수요가 많아져 조기에 물량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가 많은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재일 기자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차량매매 시 계약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근 현대자동차 대리점 등 차량 제조·판매사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사업비 673억원을 투입해 수소승용차 1481대, 수소버스 44대, 수소소형차 4대 등 수소차 1529대를 보급했다.

이들 통해 초미세먼지 17.4t, 온실가스(CO<sub>2</sub>) 2968t을 줄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34만 50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이다.

현재 광주에는 진곡·동곡·임암·벽진·월출·장등·신촌·매월 등 8곳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나병훈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지난해 수소차 신청 모델이 출시되면서 수요가 많아져 조기에 물량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가 많은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재일 기자

## 광양기업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찬성 71.9%... 규모 경제 기대

### 광양상공회의소, 기업인·시민·사회단체 의견 조사

전남 광양시 기업과 시민, 사회단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찬성하면서도 광주 및 전남 서부권 중심의 예산 및 정책 수립 현상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양 기업인 및 시민·사회단체 300곳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60.8%,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22.2%, '매우 잘 알고 있다' 14.8%, '전혀 모른다' 2.2%로 나타났다.

행정통합 추진 찬반에 대해서는 '찬성' 71.9%, '반대' 17.0%, '잘 모르겠다' 11.1%였다.

찬성의 주된 이유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51.5%,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극복' 26.8%, '광역 교통망 및 인프라 확충 가속화' 15.8%,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5.9% 순으로 답했다.

반대 의견으로는 '동부권(여수·순천·광양)의 상대적 소외 및 박탈감' 38.6%, '광주 및 전남 서부권 중심의 예산 및 정책 수립 현상 심화' 26.3%, '통합의 실질적 경제 효과 불분명' 21.1%, '기존 전남도의 지역 특화 지원 정책 축소 우려' 14.0% 순이었다.

행정통합이 전남 동부권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72.6%, '부정적' 18.5%, '변화가 없을 것' 8.9%로 나타났다.

행정통합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효과로는 '국가 예산·국책사업 유치 경쟁력 강화' 34.0%, '광역 단위 투자·산단·물류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용이' 25.5%, '교통·의료·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18.8%,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인구 유출 완화' 11.5%, '규제 완화 및 기업 행정절차 간소화' 9.8%, '기타' 0.4% 순으로 조사됐다.

행정통합 시 최우선으로 지원돼야 할 정책 분야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린 철강 공정 전환' 탈탄소 인프라 구축 지원' 16.5%, '광양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및 '이차전지 생산기지'로의 전환' 13.9%, '광양항을 '스마트 그린 종합항만' 및 '북극항로 거점 항만'으로 육성 지원' 9.3%, 'KTIX 이음 광양역 정차 및 광역연계 광역 교통망 확충' 8.9%, 'AI·이차전지·수소 등 미래 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공과대학 및 교육·훈련기관 설치' 8.6% 등이었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광주 및 전남 서부권 중심으로 예산·정책이 쏠려 동부권 소외 심화' 34.3%, '통합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 및 지역 간 감정 악화' 23.5%, '주민·기업 의견 수렴 부족, 졸속 추진' 14.3%, '세금 구조·재정 배분의 불리한 변화' 9.9% 순이

였다. 이 가운데 행정통합 시 우려하는 산업·경제 분야는 '광양제철소·여수산단 등 기간산업 지원 정책 악화' 38.0%, '광양항·여수항 개발 및 항로·수심·배후 단지 투자' 17.8%, '동부권 공공기관·행정기관 이전 또는 축소' 17.4%, '동부권 SOC(도로·철도·항만) 투자 축소' 14.0%,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약화' 12.0%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충분한 공론화 이후 중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37.8%로 앞섰고 '시기보다 내용·조건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29.7%였다. '가능한 한 빠르게 추진하자' 의견도 25.9%였고 추진 보류가 5.9%였다.

행정통합을 수용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제조건으로는 '동부권(여수·순천·광양)을 포함하는 균형발전 특별지구·특별법 제정'이 32.3%였다. '통합 이후에도 동부권에 실질적인 행정·지원 거점 유지'(14.8%)가 뒤를 이었다. 광양신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올해 광주 경제성장률 1.6~2%... 내수회복·투자확대 필요

### 광주연구원 전망... 한국경제전망 1.7~2.1%과 유사

올해 광주지역 경제성장률이 1.6%~2%로 예측됐다. 내수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속 지원, 연령별 고용률 차이 개선에 위한 정책 지원, 5급 3특 성장엔진 발굴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 국민성장펀드 연계 지역 제조, 인공지능(AI) 펀드 조성,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광주지역 경제성장률 1.7%~2.1%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 주력업종 수출 부진과 생산 위축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소비 증가·설비 및 건설투자 개선 등 제조업 전반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신종팔 기자

경제성장 개선을 위해서는 내수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속 지원, 연령별 고용률 차이 개선에 위한 정책 지원, 5급 3특 성장엔진 발굴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 국민성장펀드 연계 지역 제조, 인공지능(AI) 펀드 조성,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광주지역 경제성장률 1.7%~2.1%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 주력업종 수출 부진과 생산 위축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소비 증가·설비 및 건설투자 개선 등 제조업 전반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신종팔 기자

